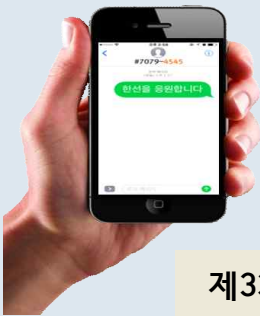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노조공화국 상황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발제자]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일 시] 2020년 04월 23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의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투적 실리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념투쟁과 정치 투쟁에 몰두하여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이념적 방향이 혼동된 상태에서 노조조직률은 11%대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로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가 감성적 노동운동을 격화시켰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조 또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써 공정성과 경제적 사회적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USR은 사회적 약자 보호, 윤리적 도덕성과 분배 공정성 확보,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 협력, 민주적 운영과 법 준수 등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
- USR의 가장 기본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노조도 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헌법과 법률 질서를 지키고 불법 파업 등을 자제하여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노조가 스스로 혁신 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업경쟁력에 기여하고 이념적 정치적 투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배타적 분배 욕구를 자제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을 감안한 적정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노사협조를 위한 타협을 투항으로, 상생을 어용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청산하고 감성에서 이성으로, 정치투쟁에서 실사구시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

◆ 한국의 노동운동

- ◆ 한국의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투적 실리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에 몰두하여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을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로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조조직률은 11%대로 노동운동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로 감성적 노동운동이 격화되었고 노동운동의 이념적 방향이 시장자본주의 인지 수정 자본주의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인지가 애매모호하다. 이념 즉 지향가치가 분명해야 한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 -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 ◆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Cedric E.Dawkins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 ◆ 사회적 책무는 사회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다. 노조 또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써 공정성과 경제적 사회적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USR은 사회적 약자 보호, 윤리적 도덕성과 분배 공정성 확보,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 협력, 민주적 운영과 법 준수 등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전투적 집단이기주의 노동운

동은 명분이 좋을지라도 사회적 책무라 볼 수 없다.

◆ 한국 USR의 배경

- ◆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임금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술의 진보로 유연한 노동시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관습화된 파업투쟁으로 국민뿐 아니라 조합원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 ◆ 노동관련 법제와 기업의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을 통해 불만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조의 권리행사보다 책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동 3권으로 보장된 권리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노조도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고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듯 노조도 조합원의 권익추구와 더불어 사회 경제발전과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합원만 이롭게 하는 폐쇄적 활동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로운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 ◆ 노조는 노동 독점권이란 특권을 부여받은 만큼 권리행사에 대한 스스로의 제약이 필요하며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대기업, 공기업 노조는 권리만큼 사회적 책무도 져야 한다.

◆ USR과 한국 노동계 시각

- ◆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차원에서 USR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그렇다고 반대한 적도 없다. 금속노조 산하 LG전자 노조는 ISO26000에 규정하고 있는 CSR을 원용해 USR 헌장을 제정했다. 금융노조, 연세의료원 등도 사회적 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 민주노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USR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 개혁적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 노동이슈와 USR: 정규직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 ◆ 노조는 사회적 노동이슈에 대해 조직 논리보다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불능력,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규직화는 사회적 책무라고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전제되어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경제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양극화 완화가 아니라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주 52시간제도 저녁이 있는 삶을 겨냥했지만, 기업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근로자의 임금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친노동정책들은 사회 공정성과 정의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 ◆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균형 잡힌 시각도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사회적 책임 즉, GSR(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도 USR 못지않게 중요하다.

◆ USR의 방향

- ◆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USR의 가장 기본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노조도 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헌법과 법률 질서를 지키고 불법 과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여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책임의 주체로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 ◆ 노조가 참여적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에 기여하고 이념적 정치적 투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배타적 분배 욕구를 자제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을 감안한 적정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 ◆ 노사관계에서 타협을 투항으로, 상생을 어용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청산해야 한다. 나아가 감성에서 이성으로, 정치투쟁에서 실사구시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